



정당별 청년 일자리 정책

현황 및 시사점

| 김대영 | 김수한 |



CONTENT

청년고용 관련 현황 및 전망

정부 청년일자리 정책의 한계

정당별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 현황

정당별 청년일자리 정책의 시사점

결론

참고문헌 및 기타자료

■ 청년고용 관련 현황 및 전망

- 통계청 자료¹에 따르면 2016년 10월 현재 15~29세 인구 940만명 중 취업자는 39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증가한 42.4%의 고용률²을 나타냈음.
 - 사회 진출 시기가 늦춰지면서 사실상 사회 진입·정착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30~39세의 경우 전체 753만3000명 중 취업자는 561만5000명으로, 74.5%의 고용률을 보였음.

- 같은 기간 15~29세의 실업률³은 8.5%(37만1000명)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10월 실업률 8.6%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1% 상승한 것이며, 실업자 수 기준으로는 5만4000명이 증가한 수치임.
 - 세부적으로 보면 20~24세 실업률은 9.3%(14만6000명), 25~29세 실업률은 8.0%(20만4000명)를 기록했고, 실업자 수로 보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만2000명, 3만9000명이 증가한 것임.

- 정부는 지난 4월 발표를 통해 2016년 청년·여성 취업연계 목표치를 3만8000명으로 설정했으나, 2016년 10월말 현재 관련 사업을 거쳐 취업한 실제 인원은 61%에 불과한 실정임.
 - 지난 4월 정부는 청년내일배움공제, 청년 채용의 날, 고용디딤돌,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이 포함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¹ 통계청 <2016년 10월 고용동향>, 2016.11, 참조.

²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³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3 만 8000 명의 취업연계 목표치를 설정했으나 2016 년 10 월말 기준, 2 만 3000 명(61%)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음.

- 이에 대해 정부는 구조조정과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기업들의 채용 여력 약화로 기업 참여유도 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 대내외적 경제 상황을 종합해보면 경기둔화 양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청년층의 실업률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⁴

- 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은행의 분석을 인용해 △2017 년 신흥국과 미국 중심의 수입수요 증가 △정부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의 요인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업 중심의 제조업 구조조정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같은 기간 실업률을 2016 년 상반기보다 0.2%p 오른 4.2%로 예측했음.

■ 정부 청년일자리 정책의 한계

- 2016 년 정부의 청년일자리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0.3% 증가한 2 조 1113 억원이며, 이 중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6.2%임.
- 2015 년 20 개였던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사업 중 5 개 사업이 폐지·통합되면서 2016 년 현재 15 개의 청년일자리 사업이 남은 상태임.

⁴ 한국노동연구원 “2016 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7 년 고용전망”, 2016. 12. 참조.

- 이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고용노동부가 애초부터 청년일자리 사업을 설계할 때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비효율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음.⁵

○ 이와 같이 정부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연 2 조 1000 억원(16 년 기준)의 예산을 투자해 청년채용 시 재정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57 개) 추진 중”이라면서도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효과성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음.⁶
-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현재의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이 한계기업들의 인건비 지원과 공공근로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

○ 이에 정부는 2015 년 7 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3 년 동안 20 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음.

-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만개의 일자리 중 신규채용은 7만5000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2 만 5000 명은 인턴과 직업훈련이라며, 청년일자리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음.

○ 이밖에도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은 ‘구직의사를 가진 청년’을 중심으로만 편성돼 있다는 한계가 지적됨.

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2016 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15. 11), 참조.

⁶ 고용노동부, <2016 년 하반기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 2016. 7, 참조.

⁷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청년 고용실태와 대책>, 2015. 8, 참조.

- 우리나라 청년 니트⁸의 비율은 18.8%로 OECD 평균(15%)보다 3.5%p 더 높은 수준⁹이지만 ‘구직의사를 가진 청년’을 중심으로 편성된 현재의 청년일자리 사업으로는 청년 니트와 같은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어려움.

▣ 정당별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¹⁰ 현황

- 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과 별개로 청년일자리 문제에 관한 각 정당의 기본 인식 및 정책 세부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청년일자리 대책과 청년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적 청년일자리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정당별 정책공약을 바탕으로 각 정당의 청년일자리 정책의 방향 및 세부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청년일자리 정책 전반을 살폈음.

⁸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15~34세의 젊은 사람을 말함.

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201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15. 11), 참조.

¹⁰ 정책의 실현 역량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6년 12월 현재 원내교섭단체의 정책공약에 한함.

■ 새누리당¹¹

- 새누리당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청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일자리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네 가지의 대표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청년희망재단이 서울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청년희망아카데미’는 다양한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에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공약임
 - 새누리당은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제한된 정보 △경험 부족 △금전적 부담 등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정보 제공 △멘토링 등의 체계적인 취업 지원 역할을 수행할 청년희망아카데미를 확대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 재원은 청년희망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새누리당 청년일자리 정책공약

-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로 일자리 연계 지원
- 전문계고, 아공계 대학 재학 시 벤처학자금 수여·벤처기업 의무 근무
- 청년 국제인턴 확대 및 워킹홀리데이·비자쿼터 확대
- 청년예술가 일자리지원센터 신설 등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

¹¹ 새누리당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2016. 3), 참조.

- 새누리당은 전문계고·이공계 대학 재학 시 벤처학자금을 수여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전문계고·이공계 출신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 및 벤처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일자리 연계 정책을 제시했음.
 - 벤처기업의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명도, 고용불안 등의 요인이 관련 업계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과 전문계고·이공계 대학 출신 청년들 사이의 일자리 연계를 통해 양측의 인력수요, 일자리 수요를 각각 충족시키겠다는 공약임.
 - 2016 년 벤처단체에서 시범운영 이후 2017 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재원은 벤처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조달한다는 계획임.

- ‘청년 국제인턴 확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국제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공관, 해외동포기업, 민간기업 해외지사의 국제인턴을 확대하고 급여 및 주거를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임.
 - 재외공관(KOICA 포함)·무역관에 파견되는 청년 인턴 수를 확대하고, 해외동포기업들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민간기업 해외지사에 청년 인턴을 파견하는 것을 세부 내용으로 함.
 - 부가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및 비자쿼터를 확대해 청년 해외진출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음.

- 새누리당의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 정책’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청년예술가 일자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전국 예술대학교에 예술일자리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청년예술가들의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내용임.

- 예술 분야의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상담, 창업 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기업이 추구하는 문화예술 사업 또는 메세나¹² 활동 수요를 파악해 청년예술가 인력을 연계하는 정책을 병행함.
 - 청년예술가들의 창업콘텐츠를 기업과 연계해 기업은 일거리를 제공하고, 청년예술가들은 기업과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 예술콘텐츠 생산하는 별도의 연계 사업도 추진함.
- 새누리당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취업 관련 정보 제공과 일자리 연계에 방점이 찍혀 있고, 직접적인 청년일자리 창출보다 구직 과정과 사회 정착 단계에서 필요한 보조적 지원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으며, 민간기업의 일자리 수요와 청년들의 희망 일자리를 일치시켜 민간의 자율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특징을 나타냄

■ 더불어민주당¹³

-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공무원 증원,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 70 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주요 공약과 함께 창업 지원, 청년 문화예술 종사자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했음.
-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는 경찰·소방·사회복지·생활지원·교육 등 공무원 17.1 만명 증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13.5 만명 증원,

¹² 메세나(Mecenat) : 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이러한 활동을 말함.

¹³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민주정책연구원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2016.4), 참조.

지속가능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4.2 만명, 정부 및 공공기관·민간수탁기관 정규직 전환 9 만명 등 총 34 만 8000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임.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에서 향후 3년 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3%→5%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부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규율함으로써 총 25 만 2000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임.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 정책공약

-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34 만 8000 개 창출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해 청년일자리 25 만 2000 개 창출
- 실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11 만 8000 개 창출
- 청년 전용 창업자금 지원 등 청년 창업 환경 개선
- 청년들의 구직 활동 지원 위한 ‘청년안전망’ 도입
- 청년 문화예술·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의 창작환경 개선 및 활성화

- 실노동 시간 단축은 법정 노동시간 준수 및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등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 총 11 만 8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힘.
- 청년 전용 창업자금·모태펀드의 청년계정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한국형 펍랩 조성, 공공특허 무상제공, 대학창업 지원 강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창업 지원 정책을 공약함.

- 2016 년 청년전용 창업자금 1000 억원을 확보하고, 청년창업자·중소기업·벤처기업에 공공특허를 무상 제공하거나 연계 지원함.
- 청년들의 생애 첫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안전망’을 도입,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미취업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할 때 6 개월간 60 만원의 취업활동지원금을 지급함.
- 청년내일찾기패키지를 확대 개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최초 등록과 상담부터 전략 수립, 직업 훈련, 경과형 일자리 제공,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까지 ‘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함.
- 청년 문화예술·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의 창작환경 개선 및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 공간을 활용한 지역 대학 관련 분야의 전시, 공연, 포럼 등에 대해 국가지원을 공약함.
-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을 적극 활용해 직접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규율 및 책임을 전제하는 일자리 정책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국민의당¹⁴

- 국민의당은 구직 청년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정책과 함께 청년구직자 인권 보호 등 청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등 청년일자리 관련 6 개 주요 정책을 발표했음.
-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은 구직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6 개월 간 월 50 만원씩 총 300 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수급자는 취업 후 4 년간 할증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함.
 - 수급대상자는 6 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하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구직자 중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자이며, 25 세 이상 구직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25~34 세 우선 적용)함.
 -

국민의당 청년일자리 정책공약

-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
- 청년스타트업 제품의 공동구매 확대
- 청년구직자의 인권 보호 강화
- 청년 노동착취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 강화
- 청년연령 재조정을 통한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
-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

¹⁴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국민 편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오늘의공상(2016. 3), 참조.

- 청년스타트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해 청년스타트업의 판로 확대 및 성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창업의 안정성을 확보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 인권 보장 관련 조항을 신설해 청년구직자의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의 후진적 채용풍토를 개선하며, 청년구직자들의 취업 의지를 고양시키겠다고 공약함.
 - 채용과 직접 관계없는 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채용 과정 중 인신공격 등의 언어폭력을 금지하며 채용완료 전 정직원에 준하는 업무강요 금지, 면접비 지급 의무화, 채용합격과 탈락에 대한 소명서 공개 등을 규율함.
- 청년들에 대한 노동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 의무교육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추가하고 대학 현장실습생, 직업체험형 인턴 등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며 고용주가 체불임금을 14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명시된 청년의 연령 규정을 34 세로 상향 조정해 관련 법령에 따른 청년 고용 지원 혜택의 대상을 확대함.

- 5 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률을 5%로 상향 조정하고, 같은 조건을 민간기업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청년일자리를 창출함.
 - 1000 인 이상 사업장부터 500 인 이상 사업장으로 순차적 적용을 거치며, 미이행률에 대해 청년고용부담금을 부과함.
 - * 500 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8만 3000 명의 고용 효과 발생
 - 청년고용부담금은 고용보험의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사업에 활용함.

- 국민의당 청년일자리 정책은 구직 단계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지원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고, 단순히 청년 창업 지원을 넘어 창업 이후의 안정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정당별 청년일자리 정책의 시사점

- 정치권의 주요 청년일자리 정책은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등 구직 활동 지원 △일자리 연계 △창업 지원 △구직 중 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집중돼 있는 편임.
 - 20 대 총선을 통해 원내교섭단체가 된 정당의 총선 정책공약집을 바탕으로 16 개의 주요 청년일자리 정책을 분석한 결과, 11 개의 정책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둘러싼 상황요인을 다루는 정책인 것으로 확인됐음.

- 취업 지원·일자리 연계 등의 간접적 지원 정책도 구직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와 청년들의 희망 일자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 전제되어야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찾기패키지의 경우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와 청년들의 훈련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일자리 연계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음.
 - 각 정당의 총선 정책공약집에 제시된 유사 정책 역시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와 청년들의 훈련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대안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해당 정책들의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 확대 적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일자리 정책이 제시된 것은 평가할 만하나, 취업 지원·일자리 연계 등에 편중된 경향은 개선이 필요함.
 -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등 구직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책이 지나치게 많으면 구직 청년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간 유사성 때문에 정책 홍보효과도 반감될 것임.

- 각 정당은 청년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청년 창업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창업으로의 가장 큰 진입장벽인 창업 실패 이후의 대책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공약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향후 이에 관한 체계적인 대안 마련을 제안하는 바임.

■ 결론

- 15~29 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17 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정부와 정치권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음.
- 2017 년에도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년실업률 또한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현재 내놓은 정책 또는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의 미비점을 확인, 청년일자리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춘 정책을 제안해야 할 것임.
- 정부는 당장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청년일자리 문제가 충분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청년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함.

-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완해야 할 정치권 또한 청년일자리 정책의 제반 조건에 관한 문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수정·보완해야 할 것임
 - 정당별 청년일자리 정책공약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취업 지원 관련 정책의 경우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와 청년들의 훈련수요가 정확히 집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루지 않았음.

- 나아가 Δ 청년 니트 Δ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의 주요 변수로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정부와 정치권이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문헌 및 기타자료

참고문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2015, <2016 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경태, 2013, “일자리 수요와 직업훈련 재정사업의 연계강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청년 고용실태와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2016, “2016 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7 년 고용전망”, 고용·노동브리프 제67 호.

기타자료

<국민 편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국민의당 정책위원회(2016. 3).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민주정책연구원(2016. 4),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2016. 3).

“2016 년 10 월 고용동향”, 통계청(2016. 11. 9).

“2016 년 하반기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 고용노동부(2016. 7. 18)

“경제위기 경고등 켜졌는데 손발 묶인 정책당국”, 연합뉴스 보도(2016. 11. 30).

“정부 '청년·여성일자리 대책' 목표치 61% 달성, 앞으로는?”, 머니투데이 보도(2016. 11. 30).

“한 해 2 조 넘는 청년 일자리 예산 다 어디로 갔나”, 시사저널 보도(2016. 10. 20).

청년정치크루

POLICREW.KR